

매일 6억7000만원 보이스피싱 뜯긴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총 피해액 2431억원...2016년比 26.4% 늘어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 총책 해외에 본거지두고 국내서 송금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1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 매일 평균 137건의 피해사건이 접수됐고 일평균 피해액은 평균 6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924억원에 비해 26.4%나 늘어난 것이다. 피해건수도 5만113건으로 전년(4만5921건)에 비해 8.9% 늘었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부분은 총책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두고 국내에서 던 피해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급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고 수사기관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팸플릿(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국어로 쓰여진다. 홍보물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의 처벌수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구해요” 광고성 문자 날아 진화...넘기면 형사처벌

통장·카드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날아 진화하고 있다. 현란한 문구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줬다는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이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요청한 경우가 줄어들어(1~5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모두 합해 811건에 달했다. 이는 전월 동기(339건)대비 139.2% 증가한 수치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다. 여기에 통장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거래매체를 통칭한다. 이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출 수단이자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자칫 이들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통장을 건네줬다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같은 '대포통장'이 연상되지 않도록 '통장'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충인'이라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은 필요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

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또한 '매매 나 잡니다' 등 문구 대신 '접수'나 '일대', '대여' 등을 써서 정상적인 거래인 양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세금감면'이나 '대금결제' 등을 이유로 들며 광고하는 한편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다.

안전거래인 양 현혹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불법'이 아닌 '판'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업체'와 같은 문구를 넣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도입' 등의 설명으로 안심시키는 방식이다.

고객의 대가도 제시한다. 가령 '통장 1개에 400만원'이나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문구 등도 속기 쉬운 문구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필요수량 조기마감'이나 '생활안정자금 마련', '용돈벌이' 사업, '부담으로 누구나 가능' 등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겨냥한 문자도 대량 확인됐다.

금융원은 대포통장 유통을 막고 불법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원은 "이같은 문자를 발송한 전화번호 이용증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입니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20~30대女 피해

상반기 서울 발생 보이스피싱 총 4642건
대출 사기형 67%...주로 40~50대男 속아
금감원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도 33%
10명 중 7명은 20~30대 여성이 피해자



올 상반기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금감원, 검찰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주로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지난 5개월 동안 4000여명에 가까운 관련 사범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체계 정비 위주 종합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관련 사범 3968명을 검거하고 이중 567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검거 인원은 67% 구속 인원은 147%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642건(피해액 613억원)이다. 이 중 대출 사기형이 3089건(291억원)으로 전체 67% 기관 사칭형이 1544건(322억원)으로 33%였다.

대출 사기형 피해자는 40~50대 남성(38.5%)이 가장 많았고 수범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많았다(66%).

또 기관 사칭형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여성(71%)이었다. 수범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직접 만나 돈을 송금받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57.6%).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25건(피해액 약 3억원) 발생하고 있어 서울경찰청은 하반기에도 단속 강화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피해 예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이 밀집해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관 사칭형 범죄에 우선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범죄 예방·홍보 전단지 제작해 배포하고 주 피해 계층인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